

# 박근혜, 이번주 국정농단 재상고심...특별사면 요건 갖추나

###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 30년→20년으로 감형형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은 갖춰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최근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

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

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병합했다.

특활비 사건에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두 분(이명박·박근혜)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면을 문제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특사 논의가 급부상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



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

지만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역시 사면 요건은 갖추게 된다.

신봉우기자



이태원 줄줄이 폐업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가게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상인 연쇄감염' 광주 양동시장 전수검사서 대부분 '음성'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상인·방문객 1394명에 대해 벌인 전수 검사에서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양동시

장 입점 상인·방문객 1394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1372명이 음성으로 판명됐다. 나머지 22명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수 진단 검사는 지난 6일 양동시장 인근 철물점 상인(광주 1285번째 확진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후시장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선제적으로 진행됐다.

1285번째 확진자와 접촉이 잦았던 시장 입점 상인 중 1명도 전날 1325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양동시장 안팎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동취재본부

## '최순실 특혜입은 작가' 허위보도... 명예훼손 집행유예

확인없이 '최순실게이트' 연관 보도 혐의 법 "기사 중요 부분, 허위사실 적시한 것" "비방목적 있었다"...징역 6개월·집유 2년

한 미술작가가 소위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연루된 인물의 입김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의 친분으로 B씨가 외국 유명 전시회 대표작가에 선정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도해 허위 사실을 게재·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보도에는 '친분이 작용해 B

씨 활동이 많아졌다', 'B씨와 같은 재단에서 활동한 지인이 평창동계 올림픽 조형물 사업권을 따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송 원장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대부'라고 불린다는, 이 같은 내용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시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장 판사는 "송 원장과의 친분이 작가 선정에 입김으로 작용했다", "개인전은 정부기관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 미술계 의혹을 가중시켰다"는 기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반론을 제기했다는 간략한 내용만 소개했고, 그 밖에 의혹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재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기사 배포에 앞서 피해자 측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기사의 내용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 판사는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해 기사를 게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민정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